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정부, 세금인상 포함된 재정운영전략 발표

- 최근 새롭게 출범한 일본 내각은 심각해지고 있는 정부 재정적자 현상을 타개하고자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한 ‘재정운영에 관한 신전략(이하 재정운영 전략)’을 발표함.
 - 이번 간 나오토 내각이 발표한 재정운영전략은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시현하고, 2011년 이후에는 국내총생산(GDP)대비 공공부채비율을 본격적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.
 - 이를 위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현 수준인 44조 3,000억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, 재정확충을 위해 총 21조 7,000억엔에 달하는 세수 증가 및 세출 삭감 계획을 밝힘.

- 특히,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으로 소비세 등의 세금인상이 가시화되자 일각에서는 급격한 세금인상이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현재의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.
 - 세재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 종료 후 초당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증세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비세 및 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재 개편을 시사함.
 - 세수증대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세정책에 대해 현재 국가 재정적자 규모가 매우 심각한 만큼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지만, 지나치게 세금인상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.
 - 또한 소비세와 같은 급격한 세금인상이 개인소비 감소로 이어져 자칫 회생하고 있는 경기회복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때, 정부 부처 간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조치와 함께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을 주문하고 있음.

(후지일보, 6/23)